

[기획]고령화 넘는 농촌 세대교체...한국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청년농 영농 기반 닦는다

한국영농신문 | 승인 2026.09.30 23:0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통해 우량농지 우선 공급...초기 자본 부담 해소

타작물 재배 임대료 80% 감면 및 시설 설치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
김철상 지사장 "현장 중심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든든한 영농 버팀목 될 것"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농기계도, 시설도, 종자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없다면 영농의 첫걸음조차 떼기 어렵다.

특히 농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확보는 가장 현실적인 진입장벽 가운데 하나다. 농지를 직접 구입하기에는 초기 자금 부담이 크고, 임차농지를 구하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농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가 관내 농지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지사 농지은행이 농업에 적합한 농지를 직접 매입해 비축한 뒤,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지속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주지사가 확보하는 농지는 단순히 면적만 넓은 곳이 아니라 실제 영농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등 우량농지를 비롯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또는 밭,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밭·과수원 등이다.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해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이 잘 갖춰진 농지를 엄선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지 구입 부담 덜고 안정적 영농 가능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농지 구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 특히 영농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농에게는 농지 구입비가 농업 창업을 가로막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지사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바로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한 뒤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농지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임차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55세 이하 농업인이 농업용 시설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임차할 수 있다. 농업에 처음 시작하거나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간 동안 농지를 이용하면서 영농 경험을 쌓고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임차료 역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임차료는 해당 지역의 표준임차료 50~100% 수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농지를 빌리려는 농업인은 위치와 재배 작목, 임차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신에게 적합한 농지인지 판단할 수 있다.

타작물 재배하면 임대료 80% 감면

광주시사의 사업 운영에서 주목할 대목은 타작물 재배 유도과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혜택이다. 사업 대상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임차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타작물 재배 또는 일정 기간 휴경을 이행할 경우에는 임대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농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쌀 수급 안정과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 등 국가 농정 방향과 발을 맞추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임차 전 재배 작목과 해당 농지의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처럼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거나 시설농업을 계획하는 경우 토질, 용수 확보 여부, 농기계 진입 여건 등 실제 영농환경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농지 확보를 넘어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영농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용 간이시설·비닐온실 설치도 가능

광주시사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경우 농업용 간이시설과 파이프조 단동형 및 연동형 비닐온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과 신규 창업농들에게 큰 이점이 된다. 다만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임대용농지매입

상속, 이농·직업전환,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안내 포스터

농지 없는 청년농에게 첫 농지 마련 기회

이번 사업에서 광주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대상은 단연 청년농업인이다. 농업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지만 자본과 인맥이 부족해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광주지사의 농지은행은 든든한 공공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아무리 우수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혔다 해도 경작할 땅이 없다면 영농의 첫걸음조차 뒀 수 없다. 반대로 임대를 통해 소규모로라도 농지를 확보한다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향후 규모를 확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광주지사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농지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다만 연령, 영농경력, 보유 농지 여부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세부 사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앞서 광주지사 농지은행과의 심층 상담을 거치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다.

농지의 세대교체...청년농에게 새로운 기회

농촌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광주지사의 행보는 지역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퇴나 고령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관리와 처분의 길을 터주고,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농에게는 소중한 영농 터전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사가 매입과 비축을 통해 농지의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자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핵심"이라며 "농지가 필요한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영농신문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